

李 “지역 자립경제 구축” 朴 “중부세 유지 필요”

지방세 비중 확대로 지방재원 확충

한나라당 대선후보별 지방분권 정책

중앙행정권한 획기적으로 이양해야

작은 정부 추구... 국가균형원 불필요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사는 '지방분권국민운동'과 공동으로 제17대 대선 정당 예비후보자들에게 대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검증하기 위해 각 후보들의 정책지지를 확인·평가, 바람직한 투표 기준을 제시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지방신문협회는 1차로 오는 19일 경선을 앞두고 있는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에 대한 정책질의 분석 결과를 게재한다.

지역인재할당제 공공부문 적극 적용

이명박 이명박 후보는 지방분권의 원론에는 충실하면서도 수도권 현실과 관련된 문제에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 "추진하되 수도권의 외연 확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자체 간의 선의의 경쟁 유도를 통해 지역별 자립형 경제기반 구축과 시장경제를 작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장 재직 시절 반대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제가 많지만, 정책 연속성을 위해 계획대로 실현하겠다는 것.

중앙행정권한의 이양, 기관위임사무 폐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이관, 광역자치경찰제도 도입, 지방자치제도(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확대,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인론 육성, 지방기업 법인세 감면, 광역거점 의료센터 육성 등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면서 최소한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방대학육성 특별법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서울 소재 대학 진학을 소망해서는 지방의 희망이 없다"면서 "특별법 등 모든 방안을 통해 지방대학 육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고 각각 답했다.

하지만, 지방분권의 의지 척도로 볼 수 있는 국가균형원 설치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작은 정부를 위해서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로스쿨 정원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지방대학에 정원을 배분해 실패한 일본 사례를 거울삼아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대학에 정원을 우선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며 "지역 인재 할당제를 사기업 부문에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여론을 분명히 했다.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를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방세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에서 지방재원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폐지는 신중히 검토해



■ 국가균형원 설치에 대한 의견				
척도	이명박	원희룡	박근혜	홍준표
1. 설치 필요하다		○		
2. 신중 검토			○	○
3. 설치 필요없다	○			
4. 입장 유보				
■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				
척도	이명박	원희룡	박근혜	홍준표
1. 모두 폐지		○		
2. 신중 검토		○	○	○
3. 폐지 필요없다				
4. 입장 유보				

■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설				
척도	이명박	원희룡	박근혜	홍준표
1. 둘다 매우 필요		○		
2. 어느 하나로 충분			○	
3. 부작용임이라 다른 대안 검토				○
4. 판단 유보	○			
■ 수도권 규제 완화				
척도	이명박	원희룡	박근혜	홍준표
1. 불가피			○	
2. 최소한의 규제 완화		○		○
3. 선 지방분권, 후 규제완화		○		
4. 판단 유보				

박근혜 박근혜 후보는 지방분권의 정책 기조로 지역의 자율성과 중앙정부의 지원기능 강화를 강조하면서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와 지역간 불균형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하되 지역별 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로스쿨 정원을 늘려, 이를 준비한 대학들이 가능한 많이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행정권한의 획기적 이양의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기관위임사무 제도의 폐지에 대해선 신중론을 폈다. 그 근거로 행정권한을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단순 분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광역자치경찰제도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이관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방분권 추진 기구로 국가균형원을 설치하는 데 대해 '신중한 검토' 입장을 보인 반면 지방세 신설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박 후보는 '세수의 역진성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답해 '폐지 신중 검토' 입장을 취한 다른 세 후보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정당 공천이 책임지지 구현에 적합하며, 공천금 등 운영상의 문제는 공천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면 해소될 수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인재할당제의 경우 공공부문은 "본격적으로 적용,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사기업 부문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적용보다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유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세계적 경쟁 추세를 감안하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에 대한 보편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로 득을 본 기업의 법인세 일부를 지방경제 회생에 사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의 박영광 공동정책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신중하면서 다분히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10대 지표를 중심으로 한 분권지수와 균형발전 지수는 라이벌인 이명박 후보와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인식을 달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로스쿨 정원 배분 문제에서는 "대

“기초장 정당공천 폐지 신중”

어떻게 분석했나 지역발전 과제 대선 의제로 33개 문항 정책 의지 평가

“초광역 행정구역 개편 찬성”

홍준표 홍준표 후보는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지방의 특성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의견을 내 놓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감안해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행정구역을 전국 초광역권으로 개편하는 사안에 대해 "개편할 필요가 없다"고 유일하게 반대여론을 보였다. 대선 광역경제권 형성을 주요 의제로 내걸었다.

이후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공동으로 질의서를 검토한 데 이어 지난 6일 우선적으로 한나라당 경선후보 4명 등에게 질의서를 전달했다. 질의서는 ▲지방분권 19개 문항 ▲지역균형발전 14개 문항 등 2개 분야, 33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각 문항에는 후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의 요지와 정책 방향 등을 담은 '정책 개요'를 덧붙였다. 또 필요한 경우 추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시된 질문 외에 구상하고 있는 지방분권 정책 등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해 후보들의 정책 의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시민운동가, 지식인 등으로 구성된 전국적인 단위의 시민단체다. 현재 광주·전남, 부산, 경남, 강원, 대구·경북, 대전, 충북, 충남, 경기 등 9개 광역시·도지역 분부와 지역경실련협의회, 울산시 민간체합의회 등 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원희룡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 중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원희룡 후보가 제일 강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체 질문 33개 중 22개 항목에서 분권화에 긍정적으로 답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특히 그는 '초광역 행정구역으로 개편'에 대해 후보자 중 유일하게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 폐지에서도 "모두 폐지"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원 후보는 ▲산업별·기능별 초광역화를 통한 행정구역 추진 ▲중앙권한을 점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해 완전 자치 실현 ▲대기업 지방이전 ▲지역인재 할당제 도입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격차 해소 등을 지방분권 주요 의제로 내걸었다.

또 지방 재정분야에서는 자주재원 확대와 지방교부세를 인상, 신설 지방세의 수도권 배분 제한 등에서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였다. 특히 지방세의 수도권 배분을 "아예 배제하거나 최소한의 배분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영기자 jpkpark@kwangju.co.kr

동행 (Donghaeng) advertisement featuring text and a large graphic.

Tempia advertisement header: "슬수록 돈 버는 냉·난방기 부담 없이 구입하세요" (Buy cooling/heating systems without burden, earning money the more you buy).

Tempia advertisement body with a bar chart showing a 1/3 price reduction and various service details.

한자한문지도사 자격모집 (Hanja/Hanmun Guide Certificate Recruitment) advertisement with a list of exam details.

Tempia advertisement footer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company logo.